우 의장 "헌법재판관 임명 협상 대상 아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우 국회의장은 기자회견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국회가 헌법재판관 선출해 보내면 임명해야 한다", "특검은 국민의 요구다, 견해충돌 언급은 온당치 않다"고 발언했다.

"특검법 여야 논의 대상 아냐… 재의요구권 행사해 국회로 보내면 될 것

재판관 9인 구성, 헌재가 국회에 요구… 여야 원대간 협의 통해 합의 마쳐"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여야 논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말했다. 또 한 권한대행에에 대한 탄핵 정족수 논란에 대해 "의결정족수는 국회의장이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우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두 사안(쌍특검법·헌법재판관 임명) 모두 국회의 논의와 결정 단계를 거쳐 정부로 넘어간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는 국회의 일을 했고 대통령과 정부가 일을 할 차례인데, 이를 다시 전 단계로 돌리자고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거나 일을 할 생각이 없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우 국회의장은 "특검은 국민의 요구다. 어느 대통령도 본인이나 가족 등 측근의 비위 수사를 거부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거듭 거부권을 행사했고, 이에 대한 국민의 비판과 분노가 매우 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이런 국민의 요구를 수용하는 동시에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해친 공공성을 입법 조치로 확보하고자 특검 법안을 통과를 시킨 것"이라고 했다.

그는 "내란특검법도 마찬가지"라며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수사를 통해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자는 것이 국민의 요구가 아니라면 무엇이 국민의 요구인가"라고 말했다.

우 국회의장은 한 권한대행을 향해 "다시 논의하자고 할 것이 아니라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정식으로 국회에 보내면 될 것"이라며 "재의요구든 수용이든 권한대행이 판단할 일인데, 견해의 충돌이라는 왜곡은 온당치 않다. 국회 의사결정의 무게를 무시하는 의미"라고 비판했다.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우 국회의장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임명은 정치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헌법재판관 9인 구성은 헌법재판소가 국회에 강력하게 요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헌법재판관 추천 몫 배분에 대한 이견을 해소하고자 지난달 22일 여야간 합의를 촉구한 바 있고, 여야 원내대표간의 협의를 통해 국민의힘 1인, 민주당 2인으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우 국회의장은 "헌법기관의 정상적 작동을 위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에 임명장을 수여하는 것을 정치 협상의 대상으로 삼을 순 없다"고 했다.

그는 "헌법재판소를 보는 것이 너무 창피하다"며 "양 교섭단체가 합의 순서를 거치면서 합의한 것이기 때문에 보내면 즉시 임명하게 돼 있다. 한 권한대행을 만나 헌법재판관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다"고 했다.

이후 우 국회의장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 정족수를 200석 이상으로 봐야 하는가, 151석으로 봐야하는가'의 질문에 "의결 정족수의 1차적 판단은 국회의장이 한다"고 답했다.

이어 "어제 국회기관인 입법조사처가 국회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의견을 낸 것으로 안다"며 "그런 점 등을 잘 참고해서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내란 세력 엄호하는 韓, 전북의 수치"

민주 도당 "내란 단죄 거부한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으로 내란 특검 열어야"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이원택 국회의원)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김건희 특검법' 공포와 상설특검 후보 추천,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야당 의견만 반영한 위헌적 요소"라고 한것에 윤석열 탄핵 거부로 국민을 배신한 국민의힘의 주장을 추종하는 것이자 내란 세력을 엄중히 단죄하라는 국민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총리 재임 중에 전북을 핍박하는 윤석열 정권의 폭정에 앞장섰고 이제는 헌정을 파괴한 내란을 엄호함으로써 전북의 명예를 더럽힌 부끄러움이자 수치로 남게 되었다고 했다.

이원택 도당위원장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계엄에 동조·방관한 결정적 결함에도 불구하고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덕수 체제를 용인하며, 한덕수 권한대행의 사명이 내란 사태 진압과 민생 회복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며 "그러나, 한덕수 권한대행은 특검법 공포와 상설특검 그리고 헌재 재판관 임명을 거부함으로써 자신이 내란 계엄을 엄호하는 내란 세력의 일부임을 증명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한덕수 권한대행의 주장은 사실과도 맞지 않는다며 "대통령 본인이 연루된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 부지 의혹'과 '박근혜 정부의 민간인 국정농단 의혹' 모두 특별검사 추천에서 여당을 제외했지만, 위헌 논란도 의견도 없었다. 윤석열의 내란 계엄은 이명박·박근혜의 죄상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국헌 유린이자 헌정 파괴 범죄인데, 탄핵조차 반대한 여당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에 어떤 국민이 동의하겠는가?"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전북도당은 내란죄 피의자이기도 한 한덕수 대행의 망동을 강력히 규탄하며 신속한 탄핵을 촉구한다."며 "우리는 내란 잔당의 '지연·선전' 책동을 엄중히 경고하며, 한덕수 탄핵으로 내란 특검을 열고 내란 세력을 단죄하라는 전북 도민의 명령을 받들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도, 2025년 상반기 승진인사 단행

실장급 1 · 국장급 5 · 과장급 12명 등 총 204명

도 3년 만에 실장급 자체 승진 오택림 국장 내정

오택림

김영식

박현숙

유호연

이현서

정화영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난 24일 2025년 상반기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이에 따르면 이번 승진대상자는 실장급(2급) 1명, 국장급(3급) 5명, 과장급(4급) 12명, 팀장급(5급) 28명, 6급 이하 158명 등 총 204명이다.

먼저, 실장급 인사에는 오택림 미래첨단산업국장이 승진 대상자로 선정됐다. 전북자치도청에서 3년 여만에 나온 2급 승진 인사다.

오택림 국장은 신흥고와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 호주국립대 경영학과 석사를 받았으며, 전북도 기획관, 복지여성보건국장, 익산부시장 등을 역임했다.

국장급 5명에는 김영식 일자리민생경제과장, 박현숙 회계과장, 유호연 총무과장. 이현서 창업지원과장, 정화영 문화산업과장(가나다 순) 등이 내정됐다.

김영식 일자리민생경제과장은 정읍고와 한국방통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전북대 핵정학과에서 석사를 취득했으며, 전북도 노인복지과장, 정보화총괄과장, 순창부군수 등을 역임했다.

박현숙 회계과장은 전주중앙여고와 전북대 전산통계학을 졸업, 전북대 정보통신공학과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공직에 입문하고 나서는 전북자치도 수질개선기획팀장, 정보화총괄팀장, 장애인복지과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유호연 총무과장은 호남고와 전북대 화학공학과를 졸업했으며, 전북도 농업정책과장, 무주부군수 등을 역임했다.

이현서 창업지원과장은 여수고와 전북대 핵정학과를 졸업, 전북도 균형발전팀장, 농촌활력과장, 농업정책과장 등을 역임했다.

정화영 문화산업과장은 동암고와 전북대 무역학과를 졸업, 전북대 행정학과에서 석사를 취득했으며, 전북도 국제협력과장, 특별사법경찰과장, 순창부군수 등을 역임했다.

아울러 과장급 승진인사에는 김재천 예산팀장, 김호식 행정팀장, 유응열 감사위원회 사무국 감사총괄팀장, 정병종 건설정책팀장, 정재관 안전정책팀장, 채서경 탄소중립팀장, 성이순 보육정책팀장, 박성진 새만금개발관광팀장, 성문호 고랭지작물시험장장, 강미숙 보건환경연구원 감염병진단과장, 유재연 보건환경연구원 수계조사과장, 윤대순 농업기술원 농촌지원과 등 12명이다. 〈2~5급 승진 인사 명단 15면〉

/이만호 기자

"내란 책동 현행범·동조세력 즉각 체포하라"

국방안보포럼 '천군만마'

국방안보 포럼(일명 대한민국 천군만마) 회원들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책동 현행범과 동조세력에 대한 즉각적인 체포와 처벌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있다.

대한민국 육·해·공군 예비역 장성과 영관 및 위관장교, 부사관, 장병들, 경찰·국정원 출신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국방안보포럼(일명 대한민국 천군만마) 회원 일동은 국가안보와 민생경제의 피해 방지를 위해 내란 책동 현행범과 동조세력에 대한 즉각적인 체포와 처벌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시국선언문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국방안보포럼 대한민국 천군만마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계기로 국방 및 안보 분야의 다양한 전·현직 전문가들이 모여 결성된 단체로, 약 4,000명의 회원이 활동 중이다. 이날 기자회견은 최근 윤석열 정권의 비상계엄 논란과 군의 사기 저하로 인한 국민 불안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군의 명예 회복과 국정 안정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들은 이번 비상계엄 책동은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를 위반한 친위 쿠데타로 감지하였다"고 전제하고, "그 근거로 신성한 국방임무를 수행하는 군 병력과 장비를 본인과 가족의 공직선거 개입, 주가조작 등의 대형 비리 의혹을 모면하려는 의도를 적어도 부수적으로 가지고 자행한 행태들이 보여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12.3 내란책동에서 다시 한번 주지하게 된 사실은 "정의로운 모든 장병들에게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국민과 역사 앞에 빛나는 평가와 보호가 요구되지만, 친위 쿠데타를 자행한 윤석렬, 군의 사명을 몰각하고 동조한 지휘관들, 맹목적인 복종자들은 부당한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댓가를 치른다"는 것을 예시하였다.

이들 천군만마 일동은 이와 같이 전제한 공동의 인식을 바탕으로, 최근 대통령권한대행의 국정조치가 '국민과 함께 하는 민심, 국민과 함께 하는 군심'에 반하는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헌법재판관 임용권 수용, △윤석열 대통령 즉각 체포, △대비태세 유지 속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적시된 정당한 명령 복종이 담긴 군복무규율 이행 등 세가지 결의 사항을 천명했다.

기자회견장에는 김태성 육군 장군(전 11사단장, 육사 44기), 이종화 국정원 국장, 하형석 경찰청 정보국장. 서남열 전청와대 행정관. 김정룡 전합참공보장교. 유은희 소령(여군 38기). 강태원 국방과학연구소 부소장. 방첩사령부 박견목 장군 1처장(육사 41기). 김진수 병장전우회장 등 각계 주요 인사들이 참여해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만호 기자

"도민과 함께 인구문제 극복"

김 지사, 인구문제 인식 개선 릴레이 캠페인 참여

전북특별자치도는 김관영 도지사가 지난 24일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하며,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도민의 관심과 협력을 독려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와 인구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 추진한 프로젝트다.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되는 캠페인은 참여자가 다음 주자를 지목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고 있다.

김관영 지사는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의 지목을 받아 캠페인에 참여했으며, 다음 주자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지목했다.

전북자치도는 인구문제에 대한 다각적 대책을 마련하며,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지난달 18일 전북형 저출생 대책으로 '청년 희망 High, 아이 Hi 프로젝트'를 발표했으며, 12월 2일에는 전북 14개 시군과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전북 만들기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전북자치도는 앞으로도 청년 도약, 외국인 포용, 생활인구와의 상생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인구정책 추진은 물론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고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인 소득 보장, 돌봄 서비스 확대, 여가생활 지원 등 종합적인 복지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김관영 지사는 "인구문제는 단순한 정책적 대응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며 "전북,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김슬지 도의원, 청년특화구역 조성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슬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제415회 정례회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청년특화구역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청년의 일자리 창출, 주거 확대, 문화공간 조성 등을 위한 도내 청년특화구역 지정에 관한 규정이다. 구체적으로는 5년 단위의 기본계획 수립, 청년실태조사 실시 등의 사항을 담고 있다.

김슬지 의원은 "최근 정부 차원에서 도시 전체를 청년 친화형으로 만드는 '청년도시'가 추진 중이고, 특정 사안이 아닌 전방위적으로 접근했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며 "이에 전북의 강점을 강화할 수 있는 전북형 정책의 필요성을 느껴 이번 조례안을 제정하게 됐고, 이를 통해 전북의 청년 정책이 더욱 성숙해지길 기대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만호 기자